"예비후보자 검증 면밀히 도덕성 갖춘 후보 선출"

민주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첫 회의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 부여 권한 검증위원장에 위임 · 의결
강력범 · 음주운전 · 성범죄 등 해당시 출마 대상 제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15일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황선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다주택 보유자 제외) 예비후보자 자격 부여 권한을 검증위원장에게 위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오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자 추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 ·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을 후보자 검증신청 시스템에 제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면밀한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력범(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 운전, ▲성폭력 ·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해당 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으로 출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15일)부터 시작된 공직선거예비후보자 공모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활동 개시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지방 체육정책 중요"… 전북체육 쇄신 요청

최찬욱 도의원, 실업팀 육성 ·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등 강조

전라북도의회 최찬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10)이 15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변화하는 체육환경과 생활체육수요 확대, 민선 체육회 출범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 등으로 지방 체육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전북체육 전반의 쇄신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과거 전북은 열악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육대회 준우승을 비롯해 무려 7회에 걸쳐 3위에 입상한 바 있고, 동계체전에서는 23년 연속 종합 4위를 차지하는 등 체육 강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라며 "전북체육 중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체육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이 시기에 도 체육행정이 선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특히, 강조한 분야는 도내 실업팀 육성과 노인체육 활성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도 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보장, 전북체육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조속 추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이다.

최찬욱 의원은 먼저, 엘리트선수를 발굴 · 양성에 있어서는 "도 교육청과 도 생활체육행정의 협력을 통해 공공중심의 체육 활성화를 통해 재능있는 학생 선수가 지역에서 성인 실업팀 선수가 되고, 은퇴 후에는 그 지역에서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 유망주를 다시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전북도민 누구나 쉽게 전 생애에 걸쳐 체육을 접할 수 있고,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은 물론 이웃 간의 커뮤니티 형성으로 외롭지 않은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스포츠복지적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덧붙여, "전북체육 중흥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 즉, 도 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다"라며 "특히, 지금이야말로 전북도와 도 교육청, 그리고 도 체육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차원 높은 전북체육의 중흥을 위해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환복위,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찾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5일 전북도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산불 발생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전북도청 14층에 위치한 종합상황실에서 산불 진화 및 지휘통제 등 산불 대응 사항을 보고 받고, 주요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이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북도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근무반(5개조 21명)을 편성해 올해 1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108일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도내 산불 발생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그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도내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자위, 국제교류센터 등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5일 전북도 출연기관인 '국제교류센터'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해서는 올해 위탁 · 공모 선정으로(전년대비 7배 증) 전북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우호친선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2021년도에 이전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찾아 진흥원 시설을 점검하고, 다양한 장학지원사업과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전북도 국제교류와 평생교육장학진흥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노인 일자리사업, 사업량 늘리기에 급급"

황영석 도의원 "대부분 월 27만원, 공익형 치우쳐"

전북지역 인구 고령화와 노인빈곤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전북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환경복지위 · 김제1)은 15일 제388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노인인구의 특성 및 사회변화 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사업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북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는 지난 2019년 노인인구비율이 20.3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22.25%로 전국 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했으며, 14개 시 · 군 중 완주군을 제외한 군 지역 모두 노인 인구비율이 34%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뿐아니라, 이는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황영석 부의장은 "현재 정부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노인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관련 정책들이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노령인구로 편입되며 노인인구의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해졌지만, 이를 반영한 일자리는 저조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형에 치우쳐 있는 실정을 꼬집으며,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발굴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으로 노동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니어클럽 등이 담당할 노무관련 문제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 수행기관 종사자들은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단기간의 형식적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통해 수행기관 등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무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황영석 부의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량 채우기에 급급해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과장직위 63.5% 행정직이 차지"

박용근 도의원, 균형 인사 실현 위한 개선 촉구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15일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북도정에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펼쳤다.

박용근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에게 먼저, "2022년도 1월 기준 도청 전체 과장직위의 63.5%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5급 복수직위 역시 행정직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그 이유를 물었고, 소수 직렬 인배와 균형 인사 실현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2023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북도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으로 국세의 지방 이전, 도내 농가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별도의 전담부서를 조직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완주군의회, 테크노 제2산단 분양가 문제 해결 나서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15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이하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천 의장과 이인숙 운영위원장, 임귀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완주테크노밸리(주) 최충식 대표이사와 관계부서 국 · 과장 등이 참석해 현재 완주테크노밸리 분양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갔으며, 정상화된 완주테크노밸리(주)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그간의 SPC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 같다는 의견에는 대표이사의 부재 등으로 원활치 못한 소통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3월 1일 임기를 시작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완주테크노밸리(주), 완주군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완주군 발전이라는 큰 그림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재천 의장은 "완주군의 많은 현안사업 중 완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완주군의 산업환경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적기에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완주테크노밸리(주), 의회가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좋은 결실로 완주군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되길 희망한다"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농업의 황금시대 열 것"

완주군수 출마 예정 두세훈 도의원 보급형 스마트팜 등 농업공약 제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인 두세훈 도의원(완주2 · 더불어민주당)이 "완주 농업 · 농촌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잘 사는 농민 ·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가는 '완주 농업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며 6번째 농업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두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준, 완주군의 농가인구는 1만6,05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농이 38% 수준으로 나타나 농업 · 농촌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제시한 핵심공약은 ▲보급형 스마트팜, ▲농산물 해외수출 지원 확대, ▲로컬푸드 시즌 2, ▲귀농귀촌 사관학교, ▲농기계 임대 · 농작업 대행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고령 · 소규모 농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시설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완주군의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둘째로 두 의원은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완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과 연계해 완주군 생산 지역농산물의 가공 · 유통 · 서비스화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사관학교'를 통해 완주군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만들고, 봉동 · 용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농기계 배달 서비스 확대, 고령농 · 여성농업인 등 영농취약계층 대상 농작업 대행 지원 확대 등의 공약도 덧붙였다.

두세훈 의원은 "농업 · 농촌은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근원이자 삶의 뿌리로 완주군의 수장이 된다면, 농민의 마음으로 잘사는 농업 ·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김제시의회, 3월 의원간담회 개최

임시회 앞두고 13건 안건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협의된 김제시의원 발의 안건은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상민의원),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택의원),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철의원),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마선거구 김영자의원),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이정자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차별 개정 건의안(이정자의원) 등 6건이다.

또 집행부로부터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문화홍보축제실),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증축공사 추진계획(체육청소년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매입사업 추진계획(환경과), ▲벽골제 자동차극장 조성 · 운영계획(벽골제아리랑사업소) 등 4개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각 현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특히 다음 임시회 기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성장과 변화에 주춧돌이 될 역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안의 심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자사업 협약 내용 공개… 민주 김두관 의원, 민간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자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하는 등 민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 의원의 민투법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등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 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유호상 기자